

실적압박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사망

혼자 세탁기 고치다 감전사 ... 금속노조 “2인 1조 작업, 안전작업표준 시급”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세탁기를 수리하다 감전돼 숨졌다.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실적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중대재해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서울지부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지회는 9월 30일 오전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가전수리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실적압박과 부실한 안전대책 탓에 노동자가 죽음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지회(아래 지회)에 따르면, 윤승환 조합원이 9월 28일 오후 담당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대형 드럼세탁기를 고치다 쓰러졌다. 윤 조합원을 발견한 고객이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을 거뒀다. 윤승환 조합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양천디지털센터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로 8년 동안 일해왔다.

사고 발생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된 곳이라 전기 차단기 자체가 고장 나거나 전기 차단기를 내리면 고장 접수하지 않은 다른 가전제품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잦았다. 베란



다 공간이 협소해 세탁기를 움직이기 어렵고, 세탁기 전선이 꽂혀 있는 콘센트는 대부분 손이 제대로 닿지 않는 안쪽에 있다. 이 아파트 작업을 배정받은 노동자들은 혼자 방문·수리하기 힘든 곳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회는 윤승환 조합원이 수리 작업을 위해 세탁기를 움직이다 급수 밸브 쪽에서 수돗물이 흘렀고, 이 과정에서 감전됐다고 추정한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사고 장소와 제품 위치 등을 볼 때 도저히 혼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사고 주요 원인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의 실적압박을 꼽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처리 건수와 수리 완료 정도를 따져 노동자

마다 등급을 매기고 진급 여부를 결정한다. 윤 조합원과 같은 센터 소속인 김문석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지회 양천분회장은 “센터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고 항상 처리 건수를 빨리, 많이 높이는 일만 신경 쓴다. 삼성이 만든 시스템 때문에 승환이가 죽었다”라며 울먹였다.

사측 실적압박·안전 뒷전에 수리 서비스 노동자들 위험 내몰려

윤승환 조합원은 사고 당일 점심 시간에 통화한 센터 동료에게 “오늘 여덟 건을 배정받았지만, 오전에 두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동료들은 재해 사망자가 센터의 실적 강요에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문석 분회장은 “숙련 기술자

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 윤 조합원이지만 남은 여섯 건을 모두 처리하지 않으면 당일 실적을 채우지 못하니 위험한 상황에도 수리를 미룰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몇 건 처리했는지를 ‘처리력’, 첫 방문 한 번에 수리를 완료했는지를 ‘초도 수리율’로 표현한다. 삼성전자서비스 센터들은 노동자들에게 수시로 실시간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처리력’에 집중하라는 공지를 보낸다. 윤승환 조합원은 사고 전날 센터로부터 ‘초도 수리 실패 사유 회신 요청’ 문자를 받기도 했다.

김문석 분회장은 “센터에서 처리

력을 높이겠다면서 하루에 열 건 이상을 처리하면 10,000원, 열한 건을 처리하면 20,000원을 지급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센터는 이 제도를 ‘이벤트’라고 부른다”라며 “노동자들을 과로와 위협으로 내모는 게 무슨 이벤트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에 2인 1조 작업 의무화와 안전작업 표준 마련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천디지털센터를 담당하는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작업중지 즉각 명령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종선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서울 지회장은 두 명이 함께 작업하면 사고 발생이 줄어든다며 2인 1조 작업

의무화를 강조했다. 윤 지회장은 “수리 서비스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작업환경은 천차만별이고 다뤄야 하는 제품이 다양하지만, 각각 작업에 관한 기초 지침서조차 없다”라며 삼성전자서비스의 부실한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종선 지회장은 업무량 폭주를 제기하며 사측에 ‘인력 충원’도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고객을 찾아가 가전제품을 청소하는 ‘케어마스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측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수리 서비스 기사 채용에 나서지 않아 수리 노동자 업무 과중·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 정부 471번째 노동자 살인”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 굴착기 치여 사망 ... 현중, 안전법규 완전 무시

9월 30일 울산 현대중공업 8도크에서 작업하다 휴게공간으로 이동하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14t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현대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확보해야 하는 작업자 안전통로를 만들지 않았고, 온갖 차량과 건설기계가 이동하는 통로에 인명사고를 막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람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수를 배치하고 작업 전 운행경로를 정해 작업자에게 주시시켜야 하지만, 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날 굴착기 작업지시서에 신호수 배치라고 써넣었지만, 명시한 신호수 역시 없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관련 법과 규정·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30일 사고를 작업 중 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몰아가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0월 1일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중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9월 30일 중대재해 책임은 분명히 현대중공업에 있다”라며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죽음을 모욕하고 원인을 왜곡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협소한 해석과 소극적인 행정 조치로 현중에 면죄부를 남발하고, 검찰은 산재사망 책임자 한영석 대표이사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산업법 635건 위반에 2,000만 원 벌금만 구형했다”라면서 “정부가 또 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노동부 울산지청에 한영석 대표이사 즉각 구속 수사와 노동자 생명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대우조선지회, 재벌 매각철회 1박 2일 상경 투쟁

대우조선 인수 계약 종결 기한 네 번째 연장 ... “졸속 매각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 노동자들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전역에서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확대간부들이 30일 대거 상경해 이틀 동안 ‘대우조선매각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노조 경남지부, 조선업종노조연대, 노동당이 함께했다.

대우조선지회 간부 등 노동자들은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이 노숙 농성 중이던 청와대 인근과 산업은행, 국회의 있는 여의도 등지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노동당 정당연설회에 두 차례 참가했다. 투쟁에 함께한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우조선 매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밀실 매각이자 현대중공업 정몽준 재벌에 주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0월 1일 파이낸스빌딩 앞 노동당 정당연설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매각 추진이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경남도민

을 얼마나 힘들게 했다. 그만할 때가 되었다”라고 꼬집었다.

김용화 수석은 “유럽 공정위가 보완 요구를 해도 그걸 못 채워서 결합심사가 연기되는 상황이다. 조선산업 호황 초입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상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9월 16일부터 오늘까지 노숙농성을 벌였다.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동지들과 경남도민들이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라며 “또다시 계약 종결 기한이 연장되었다. 잘못된 매각이라고 정부가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서울 전역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저지를 위해 투쟁을 벌이던 사이,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맺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종결 기한을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했다.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2019년 1월

에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을 인수 후보자로 확정하면서 시작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금속노조와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매각을 졸속 추진했다.

금방 마무리될 듯하던 매각은 여섯 개 경쟁국 가운데 세 개국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업결합심사는 독과점 방지를 위해 경쟁 관계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앞서 불공정 여부를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현대중공업은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서 합병 승인을 받았다. 승인 절차가 남은 나라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이다.

조선산업 전문가들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 시 LNG운반선 시장에서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독과점으로 인한 선박 수주 가격 인상 ▲선사의 선택지 감소 ▲혁신을 위한 동기부여 저해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 공정위는 자국 편들기 논란을 피하려고 유럽연합과 일본의 심사 결과만 바라보는 상황이다.